

정부 안전관련 조직 통합...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총리실 산하... 전문팀 양성·훈련 통해 피해 최소화

“국가안전처장 직위 최소한 장관급으로 해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결국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어지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가진 국가안전처 신설을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꿨던 안전행정부의 업무조정과 내부 조직정비가 불과 1년여만에 불가피한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부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이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 부처 및 기관의 조직 및 기능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흡수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이번 사고 발생 직후 안전행정부 산하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피해자 통계를 수차례 바꾸고 부처간 협업 및 소통 부재로 혼란을 부추기는 등 무능한 모습을 보인 데다 이후 확대 재편된 범부처 사고대책본부 역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온 것이다.

박 대통령은 신설되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가진 ‘국가안전처’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세부적인 기능과 조직 구성 방안도 설명했다. 이번처럼 인명피해가 큰 대형 사태가 발생했거나 화학물질 및 해상 기름 유출, 전력이나 통신망 사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고, 여러 재난이 겹쳐서 나타나는 복합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현장에 사고 수습 전문팀이 투입돼 확실한 초동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국가안전처 기능의 골자다.

박 대통령은 “상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전담부처와 소관부처가 협업해서 국민 안전을 제대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해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안전처장이 중심이 돼 사고 수습과 관련한 모든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료 가운데 재난안전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경우 순환보직 시스템 대신 이 부처에서만 근무하면서 재난 전문성을 키우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도 채용할 방침이다.

행정 관리 중심으로 채워지면서 대형 사고 발생시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재난안전 분야를 전문적인 특수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총리 산하에 신설하는 쪽

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국가안전처장의 직위가 어떻게 결정될지도 주목된다.

총리실 산하의 처장이라면 현 정부 들어 보건복지부 산하의 ‘청’ 단위에서 격상돼 총리 산하로 들어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같은 급이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사고 현장에서의 관련 부처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지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 일각에서는 국가안전처장을 최소한 장관급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대통령, 합동분향소 찾아 조문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 조문하고 있다.

‘무능정부’ 여론 갈수록 악화... 지방선거 참패 우려

박대통령 대국민 사과 배경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그만큼 현 정국을 심각하게 생각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사과는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네 번째로 특히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지 2주 만에 또다시 사과를 했다.

하지만 사과 방식이 별도의 기자회견이나 담화가 아닌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이뤄져 역시 ‘직접적인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다만 민경욱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느 정도 수습이 진행되고 재발방지책이 마련되고 있다면 사과를 포함해서 대국민 입장발

‘국가개조’ 차원 개혁전명

취임 이후 네번째 사과

‘직접 소통’ 부족 비판도

표가 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향후 대국민 담화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사과는 악화하는 여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번 사고에 책임을 지고 지난 27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부의 혼선과 무능함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좀처럼 잦아들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것이 대국민 사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별써 정치권에서는 6·4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을 중심으로 여론의 참패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워온 ‘약속과 신뢰’라는 덕목이 이번 사고로 인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박 대통령로서는 가장 곤혹스러운 대목으로 보인다.

취임 당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하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기까지 했지만 이번에 정부가 보여준 ‘아마추어리즘’은 이와는 거리가 한참 멀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사과와 함께 ‘국가개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전방위 개혁의지를 드러냈다. 1993년 서해해리호 침몰사고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재연되는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시

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며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해법으로 “고질적 집단주의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며 “해운업계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업계와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불법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유관기관에 퇴직 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쇠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국민이 공무원들의 무책임과 의식에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직사회 부조리와 문제점들을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사회가 이번에 부처 이기주의와 무사안일주의 그리고 무능함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공직사회 개혁을 무색하게 했다는 판단인 셈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43분 해질 19시 17분 달돋이 06시 18분 달질 20시 20분

진도 해상 '흐림'

구름 많은 가운데 비 떨어지는 곳 있었다.

광주	구름많음	12/20°C
목포	구름많음	12/17°C
여수	구름많음	13/16°C
나주	구름많음	12/20°C
완도	구름많음	13/19°C
구례	구름많음	12/20°C
강진	구름많음	12/19°C
해남	구름많음	12/18°C
장흥	구름많음	12/20°C
순천	구름많음	13/20°C
영광	구름많음	12/18°C
진도	구름많음	12/17°C
전주	흐림	12/20°C
군산	흐림	12/18°C
남원	비	12/19°C
혁신도	구름많음	11/16°C

종형	파고	식중독지수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주의	보통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0~1.5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주의	보통
종형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m	목포 0:51 08:01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1.5m	목포 14:57 20:09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m	여수 09:44 03:31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여수 22:10 15:4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민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5/1(목)	2(금)	3(토)	4(일)	5(월)	6(화)
날씨						
최저/최고	11/23	10/27	12/24	11/23	12/24	12/25

靑 신문고에 3개월전 '청해진 위험'

지난 1월 전 직원이 정원초과 등 고발 민원

세월호 참사 발생 3개월 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관련해 선박 안전과 운용 등에 대한 고발민원이 국 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제기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권익위 위에 따르면 자신을 전직 청해진해운 직원이라고 밝힌 민원인은 지난 1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연동된 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에 접속, '청해진 해운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고발 민원을 올렸다.

해당글에서 민원인은 청해진해운 소속 선박의 정원 초과 운영,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부당 채용 연장, 오하 마나호의 잇따른 사고 무마 의혹, 간부의 비리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월호와 유사한 구조의 오하 마나호 관련 사고 무마 의혹과 비정규직 직원 부당 채용 연장 문제 등은 이번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내용들이다.

/연합뉴스

국회, '세월호 피해지원·진상규명 결의안' 통과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과 진상 규명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재석 253명 가운데 찬성 25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먼저 남은 실종자 구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사고 대응·수습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피해 규모를 줄이지 못한 정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또 피해 당사자와 가족,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 구호와 심리 치료,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제도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많은 경기도 안산시에 피해자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원과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결의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금” 금 매매

광주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38P → 9000만원 (시세/감정가 1억 5000만원)

53P → 1억 3000만원 (시세/감정가 2억원)

77P → 2억 3000만원 (시세/감정가 3억원)

단, 2014년 4월 30일까지

문의, 010-3605-5000

경매투자

- ▶경매 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특수물건만 취급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1:1 개인지도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분사 결정

(주)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